응급수술 받은 환자, 힘겨운 입술로 울먹이며 "던 야밧"

〈고맙습니다〉

광주시 2차 구호단, 해발 2500m에 진료소
위생상태 심각·전염병 창궐 우려…환자 줄이어
현지 주민들 "의료진들, 신의 은총 받을 것"

랄릿푸르 마니킬(네팔)=최권일기자

대지진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팔에 파견된 광주 의료진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네팔 랄릿푸르 마니킬에 자리를 잡은 '광주시 2차 구호단 캠프'(이하 광주캠프)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주민들도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진 외상 환자로 상처가 감염돼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골절 및 관절염 환자 등이 많았다. 또한, 감기와 열, 복통을 호소하는 이도 줄을 이었다.

특히 그동안 폐렴 상태가 심각했지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캄치 마야골(여·60)씨는 전대병원 의료팀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전대병원 의료진 단장을 맡고 있는 신준호 전대병원 공공의료실장은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해 상처 부분에 심각한 감염 환자들이 많고, 산골 마을 특성상 병원 진료를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지진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축사 주변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전염병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손전등 불빛 아래서 3시간에 걸쳐 중상자 수술을 거뜬하게 마쳐 칭송을 받기도 했다.

지난 9일 밤 네팔 랄릿푸르 마니킬에 자리를 잡은 광주캠프 의료진들은 산사태가 발생한 도로의 낙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40대의 응급수술을 신속하게 실시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수술이 끝난 뒤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던 환자는 울먹이며 의료진에게 연신 "던 야밧"(고맙습니다)을 외쳤다.

환자와 같은 동네 주민 람하비 람살(43)씨는 "평소 같았으면, 이 어둠을 뚫고 카트만두까지 차로 4시간여를 갔어야 했는데 한국 의료팀이 있어 천만다행"이라며 "의료진들은 분명 신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대병원 의료진과 (사)희망나무 의료진 등 광주시 2차 구호단의 의료진은 지난 9일과 10일 각각 1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번에 파견된 광주시 2차 구호단은 전대병원 의료진 12명과 광주시 소방본부 119구조대팀 6명, (사)희망나무 긴급구호팀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발 2500m 높이의 랄릿푸르(Lalipur) 마니킬(Manikhel)에 한 병원 건물에 진료·구호소를 차린 뒤 텐트에서 숙박을 하며 진료 및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cki@kwangju.co.kr

네팔에 파견된 광주 2차 구호단 대원들이 지난 10일 지진피해를 당한 현지 마을 주민들에게 임시 숙소로 사용할 텐트 설치법을 알려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네팔 지진피해 사망자 8000명 넘어서…여진 계속

지난달 25일 네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0명을 넘었다.

네팔 경찰은 10일(현지시간) 지금까지 8019명의 사망자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는 1만7871명이고 완전히 파괴된 집이 29만 9588채, 부분적으로 부서진 집이 26만 9109채다.

카가라지 아디카리 네팔 보건부 장관은 전체 사망자가 1만 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신화통신에 밝혔다.

한편, 네팔에서는 지진 발생 16일째인 10일에도 규모 4~4.4의 여진이 3차례 발생했다.

카트만두 북부 랑탕 등 산악지대에서는 이날 네팔 경찰이 6명의 희생자 시신을 수습했지만,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킹 족이 많이 찾은 랑탕에는 아직 180명 정도가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네팔 정부가 긴급 구조에서 재건·복구로 구호 활동 초점을 전환함에 따라 이날 중국·러시아 탐색구조팀이 귀국하는 등 대부분 외국 구조팀은 인명구조 활동을 종료했다.

홍준표의 '자충수'

"경선자금 1억2천만원은 집사람 비자금" 해명에 돈 출처 논란 눈덩이
업무상 횡령·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홍지사 "조사 받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이 돈을 부인이 비자금으로 모아뒀다는 홍 지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받은 4000만~5000만원의 대책비를 부인에게 일부 생활비로 줬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생활비로 줬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책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용도가 특정된 돈을 다른 용도, 특히 개인용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비라는 것이 급여에 준하는 돈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업무수행비나 활동비 등의 용도로 쓰라고 지급된 돈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운영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활동비 성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이날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공자금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뒤집으려고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지사가 말한 '집사람 비자금'이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

홍 지사의 부인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는 비자금도 현금 자산으로 분명한 재산신고 대상이다.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매년 재산신고에 이 자금은 넣지 않았다.

홍 지사는 물론 '집사람의 비자금'을 이번에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도 출처에 대해 한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홍 지사는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 국회 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데 문제가 있어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1곳·전남 3곳 '생활문화센터'

서구 문화센터 등 문체부, 전국 32개 시설 조성대상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광주 서구 문화센터와, 완도 농어민 문화체육시설, 장흥 천관문학관, 함평 숲속의 곤충마을 등 전국 32개 시설을 올해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폐교나 폐목욕탕 등 지역의 유휴시설 일부를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이다.

공모를 거쳐 이뤄진 선정 시설은 지역별로 전남 3곳, 광주 1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강원 3곳, 충북 2곳, 충남 2곳, 전북 4곳, 경남 3곳, 제주 2곳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개 시설 조성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현재 여수 등 4 곳의 생활문화센터가 개소한 상태다.

올해에는 조성 사업에 120억원, 활성화 지원에 15억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까지는 약 70개소의 운영이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문체부는 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컨설팅과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활동을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